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0/20℃ 목포 11/18℃ 여수 13/19℃
단기 4342년 (음력 9월 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01호 1판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61년만에 세워진 여순사건 위령비

비문없이 '……'만

19일 여수 만성리 마래터널 입구 만흥동의 여순사건 암매장지에서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지만 여수시와 여순사건 여수유가족회가 사건 성격을 놓고 맞서는 바람에 위령비에 말줄임표 ("……")가 비문을 대신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시-유족회 '희생' '학살' 문구 갈등

이념논쟁 여전한 사회 현주소 씁쓸

여순사건 발발 61주기만에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졌으나 사건의 성격 규정을 놓고 여수시와 여수유가족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비문 하나 새겨 넣지 못한 채 제막식을 치렀다.

'학살'이라는 용어를 놓고 벌어진 이번 갈등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6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념논쟁에 휩싸여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김천우)는 여수향교·여수원불교·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만성리 마래터널 입구 만흥동의 여순사건 암매장지에서 위령비 제막식 등 추모행사를 가졌으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라는 비명만 새긴 채 사건 진실을 알리는 비문은 새기지 못했다.

여수유족회 김천우 회장은 이날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영령들의 위령비를 세웠으나 비문하나 적지 못한 채 제막식을 갖게돼 유감"이며 "아무 이유없이 처형된 희생자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수유족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시는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948년 11월초 여순사건 당시 부역 혐의자로 종산초등학교(현 중앙초)에 잡혀 있던 수백명의 시민들을 데려와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만흥동 마래터널 입구 인근에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했다.

위령비 건립사업은 당초 위령비 1개와 여순사건 설명석(비문) 1개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비문의 일부 단어와 설치공간 조성 등을 놓고 시와 여수유가족회가 맞서 결국 설명석 건립이 제외되고 위령비에도 비문 하나 없이 건립됐다.

시와 여수유족회는 비문의 '무고하게 학살된 비극적 사건'이라는 문구를 놓고 시는 '학살'이라는 표현 대신 '희생'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회가 이를 거부하고 위령비 설립 중단을 요구하는 진통을 겪었다.

위령비 설치장소를 놓고도 유족회는 자산공원과 장성공원 등의 대중적인 장소를 요구했으나 시는 공원내 비석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유족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위령비 뒷면에는 말줄임표가 비문을 대신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 말줄임표는 김진수 시인의 '나 말이어라'라는 시로써 할 말을 다하지 못한 한을 담은 무언의 항변을 의미한다.

이오성 여순사건위원장은"'희생'이라는 표현은 자발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 희생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처형됐다"며 "이런 사람들을 희생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학살 용어사용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해 8월 위령비가 세워진 이 암매장터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면서 '여순사건 만성리 학살사건' 현장으로 명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 여수군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며 발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여수지역 5천여명을 포함해 전남 동부지역에만 1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국체전 개막 제90회 전국체육대회가 20일 대전에서 개막돼 열전 7일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에서 2만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고향의 명예를 걸고 선전을 펼친다.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리허설에서 식후행사인 '대자연의 합창'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복지사업 어쩌라고…

정부, 지방교부세 대폭 감세

광주·전남 사업 위축 불가피

정부의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세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사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남의 농어촌지역 기초단체에는 복지예산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와 소외계층이 많아 이들이 기초생활에 큰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가 감액한 지방교부세 2조2천억원의 70.1%에 달하는 1조4천954억원이 기초자치단체의 몫이었다" 고 주장했다. 나머지 6천198억원(29.9%)은 광역단체 감액분으로 파악됐다.

실제 광주시는 385억원, 전남도는 무려 3천129억원이 삭감돼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됐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로 주로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는 2009년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 비중이 전국 평균인 19.3%의 두배를 웃도는 41.6%로 나타나 복지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09년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9.4%인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15.3%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사회복지 재원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 도시 및 군 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2009년 대도시의 구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1.7%였으나, 중소도시 및 군 지역의 증가율은 18.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더라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분담해야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복지사업비를 무더기 반납해야 하는 사태도 우려됐다.

곽정숙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고사업비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는 등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나로호 페어링 시험 성공후

16개월간 분리시험 한번도 안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페어링'(발사체 상단의 위성 보호 덮개)에 대한 최종 시험이 발사 1년4개월 전에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나 그 이후에는 분리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로호 페어링 분리 시험' 자료에 따르면, 나로호의 페어링 최종 시험이 발사 1년4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이후 발사 때까지 문제가 된 분리시험은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세트에 대한 화약시험과 스프링 시험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페어링 분리 시험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0차례의 진행됐다.

이 중 페어링 분리 성능 확인 시험 7회, 상단 엔지니어링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 1회, 상단 인증모델을 이용한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을 2회 진행했으며, 모두 성공했다. 특히 2006년 9월19일 이뤄진 상단 엔지니어링 모델 비행 시퀀스 확인 시험은 러시아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링은 지난해 4월3일 10차례의 분리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친 뒤 같은해 6월26일 납품됐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나로호 발사 임무 실패 책임을 따지는 실패조사위원회(FRB)가 오는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나로호의 3차 발사 여부가 결정된다. 2차 발사는 내년 5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